

# ‘불통 해명’ 80분... 더 갸름해진 대통령

■ 박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살펴보니

대선핵심 공약 경제민주화·복지 확대 쪽빠져

지역균형발전·인사탕평 등 대책 제시도 없어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통’ 논란을 해명하기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과연 불통논란을 말끔히 씻어내는데 기여했는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선 기간 동안 가장 신경을 썼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지역균형발전과 인사탕평 등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책제시도 없었는지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불통 해명**=박 대통령은 철도와 철도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대통령

의 불통 때문이라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나. 그런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론”을 펼쳤다.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통으로 막 폐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하는데 이런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걸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집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그간 소통해왔다”며 “특히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어민·소상공인·중소기업인 등 각 계각종 국민과 대표들과 만나서 소통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전반적으로 반성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데 집중하는 등 오히려 불통 논란을 가중할 수도 있는 분위기의 발언이 있

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빠져**=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의 근간을 이루는 단어였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경제’를 26회 언급할 동안 이 단어가 모두 빠졌다. 입법을 통해 경제민주화 부분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판단 때문인지 몰라도 박근혜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미 경제민주화와 복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새정치진위 금태섭 대변인은 “그간 끊임없이 약속해온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언급이 아예 빠진 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국민대통합은 어디로**=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의 가장 큰 관심

사인 지역균형발전과 인사탕평에 대한 발언도 없었다. 지방기자의 질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주장한 것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소개한 것 등이 지역정책과 의지 표현의 전부였다.

특히 인사탕평은 아예 언급도 안 됐다. 심화하고 있는 영·호남 인사 불균형에 귀를 막지 않았나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국민은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인사 대량평등을 통한 구체적인 국민 대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여 “소통의 자리” 야 “일방 메시지”

박대통령 회견 정치권 반응

박근혜 대통령의 6일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소통의 자리’로 평가하면서,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적 협력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일방적 메시지’,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기대 미흡’이란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권 2년차를 맞아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철학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공유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국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자리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국민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담겨 있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일방적 메시지만 담겨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으로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 홍보의 장이 되고 말았다”며 “대통령에게 진정한 소통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새정치진위 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민생에 대한 원론적 언급으로 일관해 국민 기대에 미흡하다”며 “기초 노령연금 등 공약 미이행 또는 후퇴에 대해서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여야도 ‘불통’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이용섭 “민주당 혁신은 공천혁명에서 시작”

광주시장 출마 거론 속 기자간담회...기득권 포기·전략공천 수용 시사

광주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6일 “민주당의 혁신은 광주의 혼을 되살리는 공천혁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부터 혁신적인 공천을 해 민주당의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유력한

광주시장후보로 거론되는 본인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시대정신에 부응하고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며 “이번 광주시장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후보, 안철수 측 후보를 이끌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도덕성과 민주성을 가진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도덕적이고 혁신적이며, 능력있는 인물을 구한다며 전략공천을 수용할 수 있겠는지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시민과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면 전략공

천도 고려할 수 있다”며 “당 지도부가 당원들과 시민들의 뜻을 수렴해 결정하면 기득권을 버리는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시장 후보가 동원 선거와 조직선거가 난무하게 되는 구태적 경선으로 결정되면 안철수 신당 출현의 물꼬를 터주는 역사적인 죄인이 될 것이며, 결국 민주당은 전국 선거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선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광주시장 경선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공천혁명’ 차원에서 ‘공감대’ 형성

된 후보를 전략공천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 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당원들과 정치적 이해 관계인들이 경선을 거치지 않은 전략공천 후보를 수용할지, 전략공천 기준과 방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략공천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은 또 “지방선거 이전에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통합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못한 주장”이라며 강운태 광주시장의 통합론을 반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새정추, 윤여준 의장 추대...창당 박차

오늘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입장 발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6일 윤여준 공동위원장을 의장으로 추대, 창당 준비를 진두지휘하게 했다.

새정추는 이날 여의도 신동해빌딩 사무실에서 공동위원장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윤 의장이 개혁적 보수 성향의 인사로 통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진보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비춰던 ‘안철수 신당’의 이념적 지향점도 중도 또는 ‘개혁적 보수’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안 의원의 지난달 새정추 첫 회의에서 ‘합력적 개혁주의’를 주장한 바 있다.

새정추는 또 조만간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예비 정치인을 발굴·육성하기로 하고 ‘새정치야카데미’도 설치해 새 정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야카데미 업무는 대학 총장 출신인 박호근 위원장이 담당한다.

이어 새정추는 7일 국회 정문관에서 소동위원장이 송호창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등 지방선거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안 의원과 윤 의장을 비롯해 새정추 공동위원장단은 오는 8일 대구 설립회에 개최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회에 지방자치발전특위 설치하자”

황우여 대표, 野에 제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6일 구의회 폐지, 단체장 임기 2연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개정특위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과 관련, “당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 1월 내에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한 수많은 개혁 논의 있었고, 당에서 그동안 정치개혁특위와 당헌·당규개정특위를 통해 전반적인 논의를 해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당 최고위에서 당헌·당규개정특위의 보고를 받고 의사를 모을 예정인데 국회도 조속히 지방자치발전특위를 설치해 1월 내에는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특히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이 2월 초로 다가왔는데 국회 논의도 가급적 그전에 마쳐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면서 “여야가 당리당락을 떠나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만을 염두에 두고 불철주야 개혁안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당 다운 여당 역할 했는지 자문해야”

유수택 새누리 최고위원

새누리당 유수택 최고위원은 6일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정부에 끌려나온 적은 없는지 스스로 묻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여당다운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박근혜정부 집권 2년차인 올해는 자동차로 말하면 역할을 끝내고 가속페달을 밟는 것처럼 국정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시점”이라면서 “국정 운영의 중심축인 집권 여당으로서 새누리당도



자기 성찰을 통한 새로운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때로 우리가 정부의 율타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집권 당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설거지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최고위원은 “권력은 시끄러운 논쟁에서 쫓고 무기력은 조용한 논쟁에서 나온다”면서 “이제 무슨 계파니 (하는 것은) 우리 당 주변에서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1.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13층 53평

전체 올수리, 코너, 주거겸사무실(방2, 거실)  
보 2천만원에 월100만원 임대가능  
대출 8,000만원 가능  
시세/분양가, 2억 정도  
매매가, 1억 5500만원

## 경매투자

1. 특수비법 배우실 분!  
배우면서 투자가능  
교육비 1,200만원
2.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수익률 연 20% 보장
3. 경매물건 사실 분!  
최소비용으로 처리
4.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사용료 연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 회사 사정상 “매매”

문의. 010-4667-9300

### 2.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상가, 1층 25평

현, 편의점 임대 중  
(보 3천만원에 월 125만원)  
대출 8,000만원 가능  
시세/분양가, 2억 5천만원  
매매가, 1억 7500만원